

통합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잠정 합의… ‘3개청사’ 균형 운영

광주시청·전남도청·동부청사 운영
통합교육감 6·3 선출유지 학군현행
인사교류 원칙 ‘보장’ 수정 우려반영
특별법 발의 앞두고 특례·입법 조율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도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안)로 잠정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시·도 청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장·전남도청·전남도청·동부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했다. 통합교육감 선출 문제는 지난 14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이뤄진 4차 합의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한 기존 안을 유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4시 광주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회의를 열어 가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점검·보완했다.

다음 주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3차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 직후 합의안 공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광주구청장 협의회, 전남시군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명칭과 청사배치 문제, 공무원 인사권 보장, 학군 조정 등 교육자치 문제, 통합 교육감 선출에 따른 이견,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명칭과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등에 대한 많은 논의 결과 1차 가안으로는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광주나 전남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현재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조항을 ‘보장한다’로 문구를 수정해 발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자치 분야 논의 안전 중 하나였던 학군제에 대해 그는 “현행을 유지하고, 통합교육감이 학군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교육감은 (기존 안대로) 1명 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교육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전제”라며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자치 후퇴, 학군 문제, 교육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특례로 담고, 통합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뽑는다.”라고 말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청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만나 입법 발의 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내달 2일부터 ‘대구로페이’ 판매

대구시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로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즉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 보유한도는 50만 원이다. 대구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올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사천시

계약서류 통합, 민원 불편 해소

사천시가 계약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 불편을 대폭 줄인다. 사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 부서 및 읍·면·동에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최대 15종에 달하는 서류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시는 계약 체결과 대금 청구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하나의 통합 서식으로 대체해 계약 상대자의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단순·반복적인 행정 처리 축소로 계약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해남군

원도심에 초콜릿거리 조성

해남군은 해남읍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현재 총 5곳의 로컬 수제 초콜릿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콜릿 거리는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초콜릿 판매장은 2024~2025년에 걸쳐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콜릿 아카데미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및 매장 복합화가 이뤄졌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관광 취약계층 여행상품 지원

전남도는 지역 내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도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과 거동 불편으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전남도 대표 복지관광 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최대 5000명 규모다. 1인당 당일 여행은 18만원, 1박2일 여행은 38만원 상당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기업 현장지원 전담조직(TF)회’에 앞서 김두겸(왼쪽 세번째)시장, 이동석(왼쪽 두번째) 현대자동차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투자기업 행정지원 전면 확대

사전 컨설팅·애로해소 리스크 점검 신속 인허가·규제개선 사업 가속

울산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기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행정 지원이 필요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투자 컨설팅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정부 규제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친기업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현장 지원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올해 모든 투자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권역별 책임관은 ▲울산·미포국가산단(남구), 울산테크노산단 등 중부권 ▲온산국가산단, 에너지융합산단 등 남부권 ▲하이테크밸리, 길천·반천산단 등 서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북구), 이화·매곡산단 등 북부권 ▲울산·미포국가산단(동구) 등 동부권으로 총 5개 권역으로 운영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북,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바이오진흥원, 현장상담 맞춤 컨설팅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도내 농생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2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들이 2026

년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북지원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핵심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김종일 기자 kij7219@

부산, 표준지가 평균 1.92% 상승

전국 평균 3.36%보다 낮은 상승률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1.9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를 밑도는 수치다.

부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부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2%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복지 수해 등 각종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시세 반영률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는 총 2만 424필지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와 비교하면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2.74%) ▲수영구(2.71%) ▲강서구(2.58%) ▲동

래구(2.28%) ▲부산진구(1.97%)가 시 평균(1.92%)을 웃돌았다. 나머지 11개 구·군은 시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중구(0.67%)와 사하구(0.80%)는 0%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부산 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 토지는 지난해와 같다. 최고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로 ㎡당 4372만원이며 전년과 동일하다. 최저가는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당 109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암군, 교동지구에 ‘현충공원’ 조성

4869㎡ 부지 사업비 23.4억 투입

영암군이 지난 23일 영암읍 교동지구에서 지역 보훈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현충공원 착공식’을 열고, 국가유공자 등을 기리는 추모·기억의 공간 조성에 착수했다.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추모·기억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일상에서 복돋을 수 있는 경관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족과 참배객들의 이동·접근 편의성도 높인다.

현충공원은 4869㎡ 부지에 총사업

비 23억4000만원을 들여 ▲충훈탑 ▲기억의벽 ▲기념광장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다.

영암군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보훈단체 회원,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안전관리 강화, 주변 불편 최소화 등 만전을 기해 건립을 마치고 영암군민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현충공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성되는 공간이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